

## 社會民主化와 大學에서의 教授運動

吳 世 澈

(延世大 經營學科)

### 1. '88년 社會民主化 運動의 評價

이 땅 위에 反自主·反民主·反統一의 억압 구조가 정착된 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의 고착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에 그 뿌리가 있다. 더구나 그것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된 군부 독재의 폭압과 독점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빚어진 민중에 대한 압살로 강화되었다. 유신 체제 붕괴 이후에 고양된 민주화 열망이 5·17 쿠데타에 의해 다시 한번 억압되자 극도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全斗煥 정권에 대한 民衆抗爭이 光州에서 일어났지만 무참한 학살로 저지되었다. 8년간에 걸친 民族·民主 세력의 싸움은 그 크기와 깊이와 폭에 있어서 우리 역사의 어느 때보다 자발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6·29 항복 선언이 시초부터 기만성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민중의 소박한 열망이 제도권 야당 세력에 의해 이용당하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것은 재야의 분열이라기보다는 보수주의적 야당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정 선거의 의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의 지지율로 다시 정권을 장악한 현 정권의 출현은 민중의 심정을 배반한 선거 제도의 헛점이었고 이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한 보수 정치꾼들과 결과적으로 그들 전략에

말려든 재야 세력의 판단 착오였다. 분열과 패배가 안겨 준 상처를 충선으로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거듭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與小野大의 현실 정치가 이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은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작년 1년 동안 국회에서 이루어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국정감사의 부활이나 청문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공 비리 척결과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반민주 악법은 고스란히 온존하고 있다. 오히려 각 지역과 부문에 있어서의 민중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을 뿐이다. 그 싸움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기만적이고 표피적인 似而非 民主化의 분위기만 조성되었을 뿐 진정한 민주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작년말부터 강화된 公權力에 의한 彈壓이라고 볼 수 있다.

반민주 악법을 아직 실정법으로 거머쥔 현 정권의 공권력 행사는 드디어 6·29 선언의 기만성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모든 운동에 전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 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다.

## 2. '88년 大學民主化 運動의 評價

대학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혁 구조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변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학민주화 운동이 공헌한 정도와 대학의 자체 개혁의 정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회민주화를 향한 학생 주체의 줄기찬 운동은 우리 사회 민중의 투쟁 역량을 높이고 민주 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정치 투쟁의 결정적인 전위 세력이 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 주체는 엄청난 희생을 견뎌내야 했으며 보수적 기성 세대로부터 용공·좌경으로 매도되고 폭력 분자로 낙인 찍혀 왔다. 그러나 지금 학생 주체는 국민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변혁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이상 사회 건설을 향한 순수한 정열을 이해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작년 6월과 8월에 전개한 統一運動은 실사 그 호응의 공감대가 좁았다 하더라도 분단 의식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중차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면 대학의 또하나의 주체인 교수는 이 사회민주화에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가? 1987년 6월에 결성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과 각 대학에서 결성된 평교수협의회의 부분적 대학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근원적인 민주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였다. 단지 몇몇 대학이 총장 직선의 선거관에 휩쓸렸고 나머지 대학들도 그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그 허구성을 경험한 바 있다. 구조의 변혁을 통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인물의 교체가 실사 그것이 적법한 선거 절차를 치루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현 단계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反民主性·反民族性·反統一性을 간파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6월 항쟁 이후 각 대학은 교수평의회 또는 평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학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학민주화의 기틀이 제도화되는 투쟁을 계속하더라도 우선 대학은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선결 과제로 보고 있으며 많은 대학이 그 과정을 밟았다. 교수들의 직접 선거를 통한 총장 선출은 지금까지 대학 사회가 국가 권력이나 재단의 전횡에 의해 총장이 임명되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대학의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자는 소박한 발상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총장 직선단이 과연 대학민주화의 열쇠가 되느냐 하는 근본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총장 직선에서 보여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반드시 교수만에 의한 직선이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좁게 보더라도 대학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 수자의 크기에 의한 결정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넓게는 동문, 직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소망이 어떤 형태로든지 총장 선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사 최종적으로 교수들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민주 총장을 공인하며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私學 가운데 반민주적 사학의 대표적 보기로 지목받던 朝鮮대가 광주 시민, 조선태의 동문,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폭 넓은 지지를 받는 민권 변호사인 李敎明씨를 총장으로 선출한 것은 대학 총장 선출의 바람직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선출 방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延世大가 소위 교황 선출식 선거 방법을 택하자 마치고 방법이 최상의 민주적 방식인양 언론 매체가 다루었는데 사실 그러한 방식이 채택된 것은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는 연세대의 사정 때문이었다. 누구든지 후보가 되고 투표자가 된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오히려 非民主性을 은폐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카톨릭 권위 체계에서 추기경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함정이 있는 것이다. 대학 사회에서 보적을 장기적으로 맡은 인물이 교수들에게 알려지기 마련이고 총장으로서의 인물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총장 입후보자는 公開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입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며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어도 입후보 등록과 선

출까지 보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절약이라는 장점이 민주적 총장 선출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세계로 교수 인원의 불균형적 분포의 문제이다. 대학에 따라 특정 단과대학 교수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 대학의 불균형적 성장의 산물이다. 물론 민주 의식의 공감대가 확보된 이상적 상황이라면 몰라도 결국 이해 집단의 학교 정치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 지적한 교수만의 투표가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대학민주화가 교수 직선에 의한 총장 선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 설사 바람직한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민주제도의 도입을 통한 構造的 改革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인물 교체라는 상징적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대학민주화 운동의 또하나의 부분적인 성과는 교수 自律 조직의 확산이다. 많은 대학이 평교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형식적 조직의 틀을 만드는 데 급급하였고 실질적인 의결 기구로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데 힘을 쏟지 못하였다. 평교수협의회를 결성하는 과정에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교수들이 제도화된 교수 기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자율적 기구의 존재 의의와 개혁 노선이 제도권 안에서 보수화되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몇몇 대학에서는 제도화된 평교수협의회에 대항하는 민주교수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주체인 교수가 학생 주체에 비하여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 사회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敎權의 개념이 교수협의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敎權은 교육의 主體性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총체적 교육 개혁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교수의 권위주의적 기득권 확보가 교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朝鮮大에서 일어난 교수에 대한 집단 정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文敎部와 大韓敎聯은 이 사건을 마치 교권의 침해인 것처럼 제도 인

론을 통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릇된 교권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교권의 확립은 반민주적 대학 구조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학습할 권리를 확보하므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켜야 할 교권을 짓밟은 반민주적 어용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표가 되는 교수의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학생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박탈시킨 비민주적 교수의 개인적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교수의 기득권이 상당수 교수가 생각하는 교권이라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태가 어디 있겠는가? 학생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교수의 교권 의식은 오히려 대학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군사부일체라는 그릇된 동양의 질서를 더 이상 미화시키지 말고 대등한 관계에서 학생과 교수의 권리가 민주 대학의 이념 밑에서 지켜져야 한다. 평교수협의회가 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교권 개념을 확립해야 하며 교수회의를 의결 기구화하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총장에게 실현될 확률이 적은 건의나 하는 기구로 만족하는 한 평교수협의회는 해체되어야 하고 새롭게 민주 운동 조직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난 해 대학민주화 운동의 성과는 교육 관계법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교수협'은 작년 11월 19일 교육 관계법 개정안을 완성하였는데 개정 이유로서 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 교육권은 국가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육 관계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주민의 교육권이 선언되고 보장되는 기초 위에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 관계법상의 국가 감독권을 제한 또는 분권화하고 자치 단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단위 학교에서의 교원과 학생이 운영 주체가 되는 학교 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교육법 개정 요구에 대하여 교육계의 비민주 세력은 이를 저지하려는 책동을 하였다. 이에 맞서 전국교사협의회, 국립대학교수협의

회 회장단,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작년 12월 22일 '민주교육법 제정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몇 가지 요구를 발표하였다.

첫째로 대한교련, 사학재단연합회, 교장단 등 어용 교육 집단들은 독재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 온 대가로 부여받은 부정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즉각 해체할 것, 둘째로 언론은 교육민주화 세력을 어용 교육 집단과 동떨어 놓고 편협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들로 취급해 온 그동안의 시각을 버리고 민주화의 거역할 수 없는 대행진에 동참할 것, 세째로 야권 3당은 수구 어용 교육 관계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청산하고 민주적 교육 관계법을 금년 임시 국회에서 최단 기간 안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교육법 마련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다. 민주교육 관계법의 개정이야말로 대학민주화의 기본적 장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대학 교수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교수민주화 운동과 교련의 확립이야말로 민주교육 관계법의 제정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폭 넓게 홍보하고 주시시킬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3. 앞으로의 大學改革과 教授運動의 方向

나는 앞 절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민주화와 대학민주화가 지난 1년간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적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걸림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수와 그 조직은 이러한 운동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였다. 교수 운동이 현실적으로 대학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더 근본적인 대학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로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自主·民主·統一을 향한 사회 변혁 운동이 군부 독재의 반자주성·반민주성·반통일성의 벽을 허물고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그 물꼬를 터 나아가고 있다. 이 도도한 역

사의 물 줄기는 6·29 항복 선언의 눈가림으로도 기회주의적 제도 야당의 현란한 몸짓으로도 막아낼 수 없음을 민중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 땅 위의 반민주 세력은 껌대기 似而非 民主化의 깃발 밑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노동 운동 탄압과 교사 운동에 대한 매도 등이 바로 현 정권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大學改革과 教授運動을 논의할 때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대학은 사회 변혁의 능동적 주체였으면서도 자신의 반민주성을 혁파하지 못하였다.

지난 1년 동안에 대학의 자율화라는 명목 아래 몇 가지 투쟁의 소득은 있었다. 교수는 교수평의회 또는 교수협의회 결성으로, 직원은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주체는 사회민주화 투쟁과 통일 운동에 힘을 쏟으면서도 대학 안의 민주화에도 부분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총장을 직선하는 것으로 대학 민주화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안이함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가시적 대학 민주화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협의회는 진정한 의결 기구화를 방기하고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를 못거두는 건의 기관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으며 오히려 과감한 대학 개혁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장애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교수회의 의결 기구화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민주교육법의 개정에 있다. 또한 교수에 의한 총장 선출은 그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수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볼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라 전체에서 5공 단절과 반민주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대학 안에서도 진정한 민주화는 달성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필코 얻어내야 하는 대학의 변혁은 무엇이며 교수 운동의 방향은 무엇인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사회 변혁의 총체적 운동 구조 속에서 역시 대학은 그 운동의 주체

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그 주체의 본 모습도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대학이어야 하고 개혁의 방향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自主性 확보를 위한 대학 개혁이다. 이 자주성은 넓은 의미로 본 民族의 自主性과 좁은 의미의 大學의 自律性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족 자주성은 외세의 억압과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신식민주의적 대학 이념과 대학 문화를 철저히 극복해야만 얻어낼 수 있다. 우리의 교육 이념 속에 민족 자주성이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반민족적 체제에 봉사하고 순응하는 기능적 나사못을 양산시키는 우리 대학의 도구주의적 이념을 청산하고 깊은 역사 인식과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역사적이고 사회적 인간을 창조하는 대학 이념과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수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역할로만 만족해 왔던 지난 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대학 자주성의 확보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대학의 주인은 정부와 재단이 아니다. 官學은 국민의 대학, 私學은 교수·학생·직원 그리고 시민의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학칙과 정관 개혁의 자율성을 대학 주체에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民主性 확보를 위한 대학 개혁은 대학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으로 달성될 수 있다. 평교수협의회 의 의결 기구화와 더불어 학생회와 직원 노동조합, 그리고 교수협의회 연대 기구를 통하여 학사와 대학 운영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권은 교수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이룩될 수는 없다. 교육 주체의 모든 권리

가 민주화의 기치 밑에서 고르게 확보될 때만 가능하다. 교수권과 학습권은 民主教育을 이룩할 수 있을 때만이 民衆的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 권위 질서를 내세우는 교수권은 절대적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며, 학습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화의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반민주 세력에 영합하거나 냉담했던 교육 주체는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하여 민주성을 완성할 수 있다. 잘못 얻어진 기득권을 버려진 아픔으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이 시대의 교육 주체가 지녀야 할 소중한 덕목인 것이다.

셋째, 統一을 향한 대학 개혁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단 이데올로기의 회생양이 되어 왔던 대학과 대학 문화는 民族統一을 향한 民族大學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사상적·이론적으로 분단의 벽을 높여 왔던 과거를 청산하며 지배 계층의 이해 대변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주입·확산시킨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반통일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왜곡시켜 교육시키지 않았는가를 반문하는 깊은 성찰이 교수 주체에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 이념과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학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 모든 대학 개혁의 과제는 개혁의 핵심적 주체인 교수와 교수 집단이 짊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끊임없는 교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역사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는 고급 지식의 전달자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自主·民主·統一을 향한 역사 인식과 사회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